

내년 이후, 대형공사 발주물량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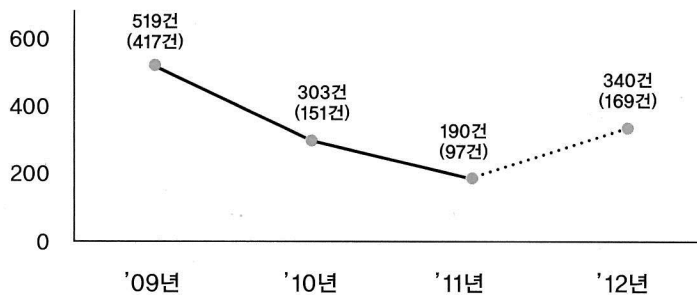
- '13년 발주물량 금년 보다 180% 증가할 듯 -

문의 |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02-2110-8382)

■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올 상반기 입찰방법 심의*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유추할 때, 내년도 300억 이상 대형공사의 발주 물량이 올해 대비 약 180% 늘어날 전망이다이라고 발표했다.

* 입찰방법 심의제도 : 추정공사비300억원이상 대형공사 등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위, 지방위, 특별위)에 입찰방법 심의를 받아 입찰방식을 결정하는 제도

'09~'12 입찰방법 심의현황



* ()는 해당년도 상반기 심의현황, '12년도 전체 건수는 예상치

■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발주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물량이 작년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나,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 그동안 침체를 보였던 공공 건설시장이 내년 이후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

- ◎ 입찰방식별로 보면 턴키 및 기술제안 공사는 전년 대비 173%(22건), 최저가 공사는 전년 대비 175%(50건) 증가하였으며
- ◎ 발주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국방부 제외)이 전년 대비 277%(78건), 국방부는 전년 대비 300%(1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이는 정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규 SOC사업* 확대 정책과 주한미군 이전, 공공기관 이전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10개 공구), 원주~강릉 철도(11개 공구) 등

◎ 다만, 지자체 사업은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지방 재정의 악화로 대부분 감소(약 50%)하였다.

■ 특히, 지금까지 대형공사의 주요 발주방식으로 자리 잡았던 턴키-대안입찰 보다 기술제안입찰* 방식이 크게 증가('11년3건→'12년 23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이는 지난 '07년 도입된 기술력 중심의 기술제안입찰 발주 제도가 상당부분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건설업계의 계획 수주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제안 입찰제도는 사업 초기 입찰부담이 저감하여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며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제안 확보도 가능한 제도라고 밝히며, 현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전공사 협력회사 계약제도 개정내용 안내

문의 | 한국전력공사 구매실 02-3456-4483

한국전력공사의 2013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계약을 위한 사업소별 추정도금액과 협력회사수, 적격심사기준 중 일부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한전 사업소별 협력회사 수 산정

- 한전 사업소별 최근 2년간(2010~2011년) 공사실적을 고려하여 사업소에서 산정 협력회사수(고압) 감소
- 2008~2009년 총 공사발주금액(고압)이 21,000억원 정도였으나, 2010~2011년의 총 공사발주금액(고압)은 19,000억원 정도로 약 2,000억원(9.5%) 축소되었으며 협력회사수가 최근 2년간 공사발주금액 감소에 따라 2013년도는 현행 대비 41개사 자연 감소
- 협력기업 CEO 간담회에서 한전 사장이 언급한 추정도금액 상향(56억원)에 따른 협력회사수는 두자리수인 69개사 감소
- 한전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약, 건의결과 추정도금액 상향을 최대한 억제하여 협력업체수 감소 최소화
- ※ 한전 사업소별 추정도금액 및 협력회사수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

◎ 적격심사기준 주요 개정 사항

- 한전에서 추정도금액을 상향시킴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적격심사기준을 정부로부터 승인
- 업계 M&A 비용부담 최소화과 다수의 전기공사업체가 배전공사 협력회사의 적격심사기준 실적합산기간을 4년으로 완화
- 특히 저압 협력회사는 영세성을 고려하여 실적합산기간을 완화하고 국가계약법의 회계예규상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실적누계액 비율 2배수를 1배수로 완화하여 업계의 입찰참여 확대
- 공통사항 : 전기공사 실적중 한전에서 발주한 공사는 사급재료비 보정계수 2.0 적용
- ※ 한전에서는 적격심사기준 중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제외한 세부심사기준은 9월중 확정 공표할 예정

고압(지중) 협력회사(VAT 포함)

현 행	개정내용	
11억원이상~55억원미만	11억원이상~55억원미만	55억원이상~110억원미만
3년 실적 / 2배	4년 실적 / 2.2배	4년 실적/2.2배
$\frac{\text{최근3년간 실적누계액}}{\text{추정도금액} \times 2\text{배}}$	$\frac{\text{최근4년간 실적누계액}}{\text{추정도금액} \times 2.2\text{배}}$	$\frac{\text{최근4년간 실적누계액}}{\text{추정도금액} \times 2.2\text{배}}$

동일공사 평가기준(추정도금액 55억원이상만 적용)

평 가 기 준	배점한도	심사기준(안)	평 점
$\text{평점} = \frac{\text{최근 3년간 동일공사실적 누계액}}{\text{추정도금액}} \times 100\%$	1점	30%이상	1점
		25%이상	0.9점
		20%이상	0.8점
		15%이상	0.7점
		15%미만	0.6점

* 동일공사 실적 : 한전에서 발주한 무정전 배전공사, 활선 배전공사실적(보정계수 없음)

저압 협력회사(VAT 포함)

현행	개정내용	
11억원미만	11억원미만	11억원이상~55억원미만
3년 실적 / 1배	3년 실적 / 1배 (현행과 동일)	4년 실적 / 1배
$\frac{\text{최근3년간 실적누계액}}{\text{추정도금액 TIMES 1배}}$	$\frac{\text{최근3년간 실적누계액}}{\text{추정도금액}\times 1\text{배}}$	$\frac{\text{최근4년간 실적누계액}}{\text{추정도금액}\times 1\text{배}}$

※ 단 3.3억원미만은 3년 실적, 1/2배 적용(현행과 동일)

대형공사 설계심의 투명·공정성 강화

- 조달청, 설계자문위 운영규정 개정 ... 위원 제척요건 강화·비리 감점 확대 -

문의 | 조달청 시설기획과(070-4056-7176)

-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설계심의를 보다 더 투명·공정하게 집행하도록 내부 규정을 일부 개정, 9월 5일 부터 시행한다.
- 대형공사 설계심의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조달청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의위원이 2년 이내에 입찰업체와 관련된 자문·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무관할 지라도 이를 제척 대상에 포함시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 * 현행은 해당 안건에 직접적으로 자문·연구·용역수행 등을 관여한 경우에 제척 대상임
 - 비리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접촉이나 사전설명 또는 낙찰자에 대한 용역·자문, 부정행위 등을 적발할 경우 적발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 * 현행은 심의위원 접촉이나 사전설명 시 감점이 경미(1점)하고, 당해 심의에 한하여 감점 적용
 - 심의위원 상호간 토론 내용을 평가사유서와 함께 기록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심의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부분도 일부 보완했다.
-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발주공사의 공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장 안전 지키고 산재보험료 할인받으세요

-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등 「보험료징수법」입법예고 -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2-6922-0913)

-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산재예방요율제」를 실시한다.
 - ◎ 전체 재해자수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자수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5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를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 * 전체 재해자수 대비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 점유율(%) : 78.3(08) → 79.6(09) → 80.9(10) → 82.4(11)
 - ** 50인 이상 사업장 재해율 대비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 비율 : 3.31배(08) → 3.41배(09) → 3.59배(10) → 3.92배(11)
- 고용노동부는 8.7(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산재예방요율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 ◎ 이 제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우선 제조업부터 실시하되 성과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 산재보험요율 할인을 받으려면 위험성평가* 등 일정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컨설팅도 실시한다.
 - * 사업주가 작업장의 위험요인과 위험성을 파악·평가한 후 위험성 저감대책을 수립·이행하는 활동으로서,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기법임
-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한 점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 ◎ 신규 채용 및 퇴직, 휴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아 보험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 보험관계 폐지신고,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경우 고용정보 신고,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정보 신고, 근로자 휴직 등 신고
 - ◎ 또한,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존에는 실제 신고해야 하는 보수총액에 미달할 때에만 수정신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수총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 * '11년 4대보험 징수통합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고용정보관리제가 도입되어, 사업주는 3월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공단은 보수총액신고서를 근거로 해당연도 보험료 부과 및 전년도 보험료 정산
- 이체필 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손실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소규모 사업장들은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산재예방 활동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고 전하면서,
 - ◎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면 산재보험요율 할인은 물론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므로 소규모 사업장이 좀 더 자율적으로 예방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7일까지이며,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259곳 공개

- 고용부, 사망재해 발생 등 재해율 상위 사업장 명단 발표 -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2-6922-0918)

- 고용노동부는 9.6(목)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사망사고가 다발한 사업장 등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259곳을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공개하였다.
- ◎ 이번에 공개된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 2011년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을 넘는 사업장 중에서 상위 10% 사업장(재해자 2명 이하 제외) : 232곳
 - 2011년에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사망만인율(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수로 환산한 수치)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20곳
 - * '11년 공표 시 재판에 계류 중이어서 보류되었던 사업장 중 유죄가 확정된 사업장 4곳 포함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 : 6곳
 - 2011년에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 : 1곳
-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명단 공표제도」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9회에 걸쳐 총 1,828곳을 공개했다.
-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물론 명단 공표와 같은 사회적 제재를 강화할 예정인 만큼 사업주는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아름다운 명언

- 오그 만디노 -

I will persist until I succeed.
 Always I will take another step
 If that is of no avail,
 I will take another, and yet another.
 In truth, one step at a time is
 not too difficult, I know that small
 attempts
 repeated will complete any undertaking.

나는 성공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다음 걸음을 내디딜 것이고,
 설령 그것이 헛되이 끝난다 해도
 다음, 또 다음 걸음을 땀 것이다.
 한 번에 한 걸음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작은 시도들이 모이고 모여 결국 일이 완성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